

인도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7. 3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9
IV. 국제신인도	12
V. 종합의견	14

I. 일반개황

면적	328.7만 km ²	G D P	2.2조 달러 (2016년)
인구	13.3억 명 (2016년)	1 인 당 GDP	1,656달러 (2016년)
정치체제	의원내각제	통 화 단 위	Rupee (INR)
대외정책	비동맹 중립 및 실용주의	환 율(달러당)	67.20 (2016년 평균)

-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,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,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.
-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으며, 세계 2위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음.
- 2014년 5월 모디정권이 출범한 이후 다양한 개방·개혁정책이 추진되어 부정부패 척결, 인프라 개발, 친기업적인 환경 구축 등 정치·사회적 안정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고 있음.
-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AARC) 결성,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,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북쪽 국경지역에서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□ 2016년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세 다소 둔화

-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증가세 급락,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회계년도 기준 2010년(2010년 4월~2011년 3월) 이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, 2013년 농업 생산량 증가와 수출 회복, 2014년 모디 정부 출범과 함께 성장세를 회복함.
- 2015년에는 숙련 노동자 부족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성장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, 지속적인 경제개혁 노력 등으로 7.5%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.
- 2016년에는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와 농업 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*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.5%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.

* 화폐개혁: 2016년 11월 인도 정부가 '지하경제 및 통화위조' 근절을 목표로, 통용되는 주류 화폐인 500루피와 1,000루피 등 고액권 현금에 대해 통용을 금지하고 신권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함. 인도에서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으로 동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부족 및 소비위축 현상이 나타남.

□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물가안정세 유지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후조건에 따른 식료품과 농산물 가격 및 에너지 연료 가격 변동,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2013년까지 9%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, 2014년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6.7%로 둔화됨.
- 2015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목표 공식 도입,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4.9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식료품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(2.0%~6.0%) 범위 내인 5.0%의 물가 안정세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됨.

- 인도중앙은행(RBI)은 2015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 도입하여 물가 안정 달성을 우선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을 영위하고 있음.

□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

- 비효율적인 조세제도와 낮은 징수율로 인한 세수 부족과 더불어, 연료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.
- 2015 회계년도에는 수입관세, 서비스세 등 간접세의 징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, 사회 인프라 구축,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GDP 대비 -3.9%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.
- 2016 회계년도에는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지출과 함께 농촌개발과 농민복지에 대한 예산확대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-3.8%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인도 정부는 2016년 11월 화폐개혁 실시를 통해 비공식경제 축소로 세원 확대, 2017년 7월 상품서비스세 법안 시행 추진과 함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2017 회계년도까지 3.2%(2018 회계년도 이후 3%)로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< 표 1 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 ^e	2017 ^f
경 제 성 장 률	6.7	7.2	7.5	6.5	7.0
소비자물가상승률	9.9	6.7	4.9	5.0	5.1
재 정 수 지 / GDP	-4.5	-4.0	-3.9	-3.8	-3.2

자료: IMF, EIU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교육 부문 투자 부족 및 취약한 보건·의료 부문

- 2012년 기준 인도의 GDP 대비 정부의 교육지출 비중은 조사대상 118개국 중 83위로 하위권이며, 2014년 기준 인도(2013년 기준)의 학생-교사 비율은 조사대상 112개국 중 10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.
- 세계경제포럼의 2016~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따르면 보건·의료부문이 취약하여 결핵의 사업상 영향(129위), AIDS의 사업상 영향(127위), 신생아 천 명당 영아 사망자 수(115위), 10만 명 당 결핵 발생 건수(111위), 기대수명(106위) 등 전반적으로 보건 부문이 하위권(105위/138개 국)을 기록하고 있음.

□ 열악한 사업환경 및 낙후된 사회간접자본

-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('16년 10월 발표)에 의하면, 인도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함.
 - 소액투자자 보호(13위), 전기공급(26위), 자금 조달(44위) 등은 양호한 반면, 건축인허가(185위), 세금 납부(172위), 법적분쟁해결(172위), 창업(155위) 등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.
- 세계경제포럼의 2016~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따르면 인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38개 국 중 68위를 기록하였음.
 - 특히, 무선전화 가입자수(123위), 유선전화 회선(114위), 전력공급의 질(88위)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.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19년까지 도로, 철도, 에너지 등 인프라 부문에 4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.

□ 과도한 공공채무로 인해 은행부문 부실화에 대한 지원 제약

- 각종 보조금 정책, 부실 공기업 지원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2016년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51.8%로 인도네시아(31.6%), 필리핀(42.3%), 태국(46.3%) 등에 비해 높은 수준임.
- 2016년 공공채무 이자비용이 재정수입의 약 35%를 차지하는 등 외부충격 대응 등을 위한 재정여력이 크지 않음.

-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자산부실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, 국영은행이 전체 은행업계 자산의 75% 수준을 차지함.
- Moody's에 의하면 상업은행의 부실채권(NPL) 비율은 2016년 3월 말 7.8%에서 2016년 9월 말 9.1%로 상승함.
- 국영은행은 2019년까지 GDP의 2% 수준인 450억 달러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국영은행 지원을 위해 110억 달러를 승인한 상태로, 국영은행 자체적인 자본조달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국영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만연

-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가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 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)에서 인도는 조사대상 176개 국 중 79위로 중국, 브라질, 벨라루스 등과 같은 순위를 기록함.
- 모디 정권 출범 이후 4,000억 달러 규모의 블랙머니 특별수사팀 신설 등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2015년 12월 인도 중앙조사국(CBI)은 2,200명의 부정부패 연루 공무원 관련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 내수시장 보유

- 인도는 13억 명(세계 2위)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유엔경제사회국(UNDESA)에 의하면 2022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. 2016년 GDP(2.2조 달러, 세계 7위) 대비 민간소비 비중 61%, 내수 비중 99%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중산층 인구 급증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- PwC(2012)에 의하면, 중산층* 인구가 2010년 1.7억 명에서 2021년 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신흥 중산층** 인구도 4.7억 명에서 5.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* 중산층: 가계 연소득(INR) 300,000~850,000(달러: 5,614~15,907, 2012년 평균환율 53.44 적용)

** 신흥 중산층: 가계 연소득(INR) 150,000~300,000(달러: 2,807~5,614, 동일환율 53.44 적용)

-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각각 65.6%, 28.8%이며 생산가능인구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, 향후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예상됨.

□ R&D 투자 등에 따른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높은 ICT 서비스 수출 비중

- 2013년 상위 3개 기업의 평균 R&D 지출비를 기준으로 인도는 조사대상 44개 국 중 20위 수준으로 대규모 R&D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.
- 세계경제포럼의 2016~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따르면, 고등교육 관련 인도는 조사대상 138개 국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.
- 2013년 기준 대졸 이상 졸업생 중 과학 및 공학 졸업자 비율이 조사대상 102개 국 중 8위를 기록하는 등 과학 및 공학에 강점이 있음.
-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들과는 달리 무역에서 통신기기, 컴퓨터, 정보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.

다. 정책성과

□ 정부-중앙은행 간 정책공조로 물가안정 달성

- 2015년 3월 인도 재무부와 인도중앙은행(RBI)은 물가 목표*를 공식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물가 안정, 재정건전성 확보, 경기 부양 등 거시경제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함.

* '16.1월까지 6% 이하, '17.3월까지 5% 이하, 그 이후는 4(±2)%를 유지하기로 합의

- 이에 따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시기적절한 금리인하*를 통해 경기부양에 일조함.

* '14년 말 8.0%였던 기준금리를 '15년 1월, 3월, 6월, 9월 네 차례에 걸쳐 1.25%p 인하한 이후 2016년에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0.5%p 인하하여 6.25%로 유지

- 다만, 물가안정 목표제의 공식 도입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 점은 긍정적이거나, 통화위원회 구성원 결정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.

□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른 경제성장세 지속

- 2014년 12월 모디 정권은 10대 국정과제*를 선정하고 개혁·개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음.

* 정부 신뢰구축, 창의적 의사결정, 보건·교육·수자원 개선, 정부 투명성 강화, 부처간 협력 강화, 국민에 기초한 정부, 경제살리기, 인프라·투자 개혁, 정책 시행의 시의성 확보, 정책의 안정성 확보 등

- 'Make in India'* 등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라 스마트시티 구축, 초고속 열차 건설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친시장 정책이 시행됨.

* 자동차, 생명공학, 건설, 방위산업 등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여 제조업 비중을 '22년까지 25%로 확대할 계획

- 다만, 정치적으로 민감한 노동법 및 토지법 개정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아 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
3. 대외거래

□ 유가하락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감소세

- 상품수지 적자는 2012년 2,01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원유수입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1,10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- 인도는 2015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소비국으로,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 원유 수입규모는 회계년도 기준 2013~2014년 1,640억 달러에 달했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2015년 절반 수준인 829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2016년에도 690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-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품수지 적자 감소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.
- 2015년 경상수지 적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273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축소됨. 2016년에도 저유가에 따른 원유 등 수입 감소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도 87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됨.
-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12년 -5.0%로 확대된 이후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-0.4%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.

□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

-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 확대*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5년 3,343억 달러, 2016년 3,48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규모임.

* FDI 유입(억 달러): 240('12년)→282('13년)→346('14년)→440('15년)→450('16년)

- 월평균 상품·서비스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2년 5.6개월에서 2015년 7.5개월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수준임.

□ 총수출 감소로 GDP 대비 총수출 비율 하락

- 총수출은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품인 석유정제 제품 등 수출 감소와 함께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를 나타냄.
- 이에 따라 GDP 대비 총수출 비율도 2013년 25.8%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9.8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정부의 적극적 외채관리로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유지

-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2~23% 내외를 지속하며 태국(37%), 인도네시아(35%), 필리핀(28%) 등 인근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 총외채 중 중장기 외채 비중은 상승추세를 보이며 2016년 약 83.7%로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.
-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년 7.8% 대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임.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6년 112% 수준으로 총수출 감소와 외채 증가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.
- 2015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4.4%로 양호한 수준이며, 2016년에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단기 유동성 관련 걱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< 표 2 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 ^e	2017 ^f
경 상 수 지	-49,123	-27,316	-22,456	-8,708	-12,129
경 상 수 지 / GDP	-2.6	-1.3	-1.1	-0.4	-0.5
상 품 수 지	-162,577	-144,046	-136,885	-110,181	-119,554
수 출	319,719	328,387	272,353	259,349	279,711
수 입	482,296	472,433	409,238	369,530	399,265
외 환 보 유 액	276,493	303,455	334,311	348,650	356,234
총 외 채 잔 액	427,296	457,552	479,559	486,843	505,437
총 외 채 잔액 / GDP	22.9	22.4	23.1	22.2	22.1
D S R	5.7	6.2	7.2	7.8	7.7

자료: IMF, EIU, OECD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(BJP) 정권 유지

- 2014년 5월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이 하원의석의 과반의석 이상(282석/총 543석)을 차지하여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30년만에 단독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.
- 모디 정권 출범 후 관료주의 타파, 인프라 개발, 기업환경 개선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과 정부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음.
 - 2014~15년 7%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, 2016년에도 6.5%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2017년 주의회 선거 승리로 모디노믹스 개혁정책 추진 다시 탄력

- 여당이 상원에서 의석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30%만을 차지하는 등 열세로 인해 모디 정권의 주요 개혁안들이 의회 표류 중임.
 - 모디 정권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개정, 통합 부가가치세(Goods and Services Tax: GST) 도입을 추진하였으나, GST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개정안은 상원 내 여당의 열세로 인해 상원 통과에 실패함.
- 2017년 2~3월 치러진 5개 주의회 선거에서 인도국민당은 편자브 주를 제외하고 인구 2억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 등 4개 주에서 연정 등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주 정부와의 공조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빈부격차와 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 불안 요소 상존

- 1947년 카스트 제도가 공식 철폐되고 정부의 하층카스트 우대정책 등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인들이 동 제도를 여전히 숙명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계층 간 갈등사태가 유발되고 있음.
- 2016년 2월 인도 하리아나 주에서 중간층 카스트에 속하는 '자트'들이 공무원 선발, 대학 입학 등에 부여한 '하층 카스트 우선할당제' 관련 자신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 하층 카스트로 분류해 달라며 폭력 시위를 일으킴.
- 다만, 높은 소득격차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의식,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이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.

□ 반군에 의한 폭력사태 발생

- 인도 차티스가르 주와 자르칸드 주 등 중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마오주의*를 추종하는 인도 공산반군(Naxalite)의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함. 정부의 진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산반군은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정부의 반군 근절이 어려움.

*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, 농민중심의 혁명 추구

- 2013년 1,129건의 낙살라이트 폭력사태로 인해 3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 2015년 4월 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의 경찰이 사망하였고, 2016년 2월 인도 경찰은 8명의 낙살라이트 반군을 사살함.
- 2015년 6월 동북부 마니푸르주에서 분리주의 반군이 정부군 20명을 살해하는 등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의 폭력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함.

3. 국제관계

□ 실용주의 대외관계 노선 추구

- 성장잠재력과 대규모 내수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내 영향력 확대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위해 모든 국가와 긴밀한 균형 관계를 유지함.

-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AARC) 결성을 주도한 이후, 남아시아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긴밀한 정치·경제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.
- 또한 2015년 12월,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며 경쟁국인 독일, 일본, 브라질 정상과 4개국 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,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, 일본 및 아세안국가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음.

□ 주변 국가와의 영유권 분쟁 등 갈등 지속

- 2015년 12월 인도-파키스탄 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으나, 파키스탄과 1947년 분리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등 적대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2016년 9월 카슈미르 지역 인도군 기지가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18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이후 인도·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재연되며 국경지역 교전 위험이 증가함.
- 중국과는 2014년 9월 정상회담 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12개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경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국경지역* 영유권 분쟁 등 정치적 긴장관계를 지속함.

* 서북부 잠무-카슈미르 주,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등 총 4,000km에 이르는 지역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감소세이며 승인금액 대비 미미한 수준

- 2016년 말 기준 인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승인액은 242억 달러 (단기 38억 달러, 중장기 204억 달러)이며, 감소세인 연체금액은 중장기 승인액에 대해 55.7백만 달러(중장기 승인액의 0.27%)로 미미한 수준임.

- * 중장기승인액에 대한 연체금액(백만 달러): 75.6('12년 말)→101.0('13년 말)→60.7('14년 말)→70.8('15년 말)→55.7('16년 말)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투자적격 등급 유지

- OECD는 인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, S&P, Moody's, Fitch는 각각 2007년, 2004년, 2006년에 인도에 부여한 최하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- Fitch가 2013년 6월 등급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S&P도 2014년 9월 등급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조정함.
- Moody's는 인도의 최근 정책이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여 2015년 4월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조정함.

<표 5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B2 (2017. 3.)	B2 (2016. 3.)
OECD	3등급 (2016. 6.)	3등급 (2015. 6.)
Moody's	Baa3 (2016.11.)	Baa3 (2015. 4.)
Fitch	BBB- (2016. 7.)	BBB- (2015.12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 수립: 1973년 12월 10일 (북한과는 1973년 12월 10일)
- 주요 협정: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('74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'76년, '06년 개정), 이중과세방지협약('86년, '16년 개정), 투자보장협정('96년), 세관협력협정('06년),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'10년),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('14년)

□ **해외직접투자 현황: 우리나라의 제16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**

-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, 섬유제품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6년 12월 말 누계 기준 43.7억 달러(신규법인 수 864건)를 기록함.

□ **교역 현황: 우리나라의 제11위 교역 대상국이며 무역수지 흑자 감소세**

- 인도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대상국, 제23위 수입대상국임. 2010년 1월 한-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이 발효되어 교역규모가 2009년 122억 달러에서 2011년 20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수입 감소로 양국간 교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, 무역수지 흑자도 2011년 205억 달러에서 2016년 158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.
- 상품 양허, 서비스 추가 자유화 등을 위한 한·인도 CEPA 개선협상이 2016년 10월(서울)과 2017년 2월(뉴델리)에 개최되는 등 양국간 CEPA 개선협상이 진행되고 있음.

<표 6> **한·인도 교역 규모**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4	2015	2016	주요 품목
수 출	12,782	12,030	11,596	철강판, 무선통신기기, 자동차부품
수 입	5,275	4,241	4,189	석유제품, 알루미늄, 정밀화학원료
교역규모	18,057	16,271	15,785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V. 종합의견

-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경제개혁 노력 등으로 2015년 7.5%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며, 2016년에는 인프라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와 농업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에 따라 6.5%로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.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~13년 9%대에서 물가목표제 도입 등으로 2015~16년 5% 이하로 둔화되는 등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.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과 함께 농촌 및 농민 관련 예산 확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-3.8%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- 저유가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등 상품수지 적자 축소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세에 있으며,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-1.1%에서 -0.4%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.
- 친기업 성향의 모디 정부는 출범 이후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음. 인도 상원 내 여당의 열세 등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, 2017년 주 의회 선거 승리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
-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우려되나, 경상수지 적자 규모 축소, GDP 대비 22% 수준의 낮은 외채비중, 단기외채 대비 4배 이상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.

선임조사역 김찬수 (☎02-6255-5704)

E-mail: avik@koreaexim.go.kr